

# 공공부문 개혁과 2001년 재정운영 방향 2

자료제공 · 한국생산성본부

- 본 자료는 지난 12월 15일 금요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는 제63회 한국생산성본부 주최의 최고 경영자 조찬회가 있었다. 이날 조찬회의 강사로 기획예산처의 전윤철 장관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개혁과 2001년도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다음은 전장관의 강의록 발췌문으로 지난 호에 이어 연속 게재하오니 많은 참조바랍니다.)

### Ⅲ. 2001년 재정운영방향

#### 1. 그동안의 재정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 IMF 사태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주력  
⇒ 예상보다 빨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

• 성장률(%)	△6.7('98)	→ 10.7('99)	→ 8수준('00)
• 실업률(%)	8.6('99. 2월)	→ 4.8('99. 12월)	→ 3.6('00. 9월)

- 경제가 회복되면서부터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본격화  
⇒ 「경제활성화 - 재정적자 축소」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98		'99		'00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 적자국채(조원)	11.7	9.7	13.5	10.4	11.0	6수준
• 통합재정수지/GDP(%)	△5.0	△4.2	△5.1	△2.7	△3.4	△2.0이내

#### □ 향후 재정운영 방향

- 민주주의 · 시장경제 ·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과 인권국가 ·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 · 생산적 복지

- 정착·국민화합·남북교류협력 등 5대 목표실현을 적극 뒷받침
-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2003년 균형재정 달성
-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지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

## 2. 200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역점부분

재정건전화노력을 가속화하면서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

-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강화
  -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세출구조 조정
  -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를 확충
  - 정보인프라 구축,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
  - G-7 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위한 R&D 투자확대
  -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투자 확충
-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지원
  -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 국민건강·안전·환경 등 생활의 질 향상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 중점 지원
  - 완공·효율 위주로 SOC 투자 확충
-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

### 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강화

- 균형재정 조기 복귀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은 금년 대비 6.4%로 책정(6.1조원 증액)
  - '01년 경상성장률 전망치(8~9%)보다 2~3% 이상 낮게 유지
- 내년 국세수입은 금년 전망대비 6조원수준 증가 예상
  - \* 국세(일반회계) : ('00예산) 68.8 → ('00전망) 79.6 → ('01예산안) 86조원

○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00예산보다 3.1조원 감소

□ 세수증가분을 활용, 국채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

○ 적자국채 발행 : 11조원('00예산) → 3조원('01예산안)

○ 통합재정수지도 GDP대비 Δ1%이내로 크게 개선

	'00예산	'00전망	'01예산안
• 재정수지(대 GDP, %)	Δ3.4	Δ2.0이내	Δ1.0이내

〈재 정 규 모〉

	'00예산(A)	'01예산안(B)	증감액(B-A)	증가율
A. 일반회계	887,363	949,300	61,937	7.0
• 국세수입	688,001	860,378	172,377 <sup>주)</sup>	25.1 <sup>주)</sup>
• 세외수입	89,862	58,922	Δ30,940	Δ34.4
• 국채발행수입	109,500	30,000	Δ79,500	Δ72.6
B. 재특회계(순세입)	61,836	61,000	Δ836	Δ1.4
재정규모(A+B)	949,199	1,010,300	61,101	6.4

주) 금년 전망 대비 8.1% 증가

나.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를 확충

□ 정보인프라 구축과 지식정보격차 완화

○ 초고속통신망 고도화, 디지털컨텐츠 등 첨단지식정보산업 육성

차세대 인터넷 등 핵심기술 개발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9,090억원)

○ 주요 민원업무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제 구축 등

전자정부(e-Government)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4,600억원)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 PC보급,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 방지 등 정보격차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 확충(2,562억원)

□ 과학기술(R&D) 투자 확충

○ G-7 국가수준의 과학기술력 달성을 목표로 R&D 예산비중을 지속 확대('00년 4.0% → '01년 4.3%)

○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21세기 프론티어기술과 우주개발기술 등 미래선도형 기술개발 본격 투자(1,846억원)

○ 부품·소재, 생산현장 애로 기술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직결된 생산기술개발 지원(6,106억원)

○ 신약개발·의료·SOC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 투자 확대(1,288억원)

□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 대폭 확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내국세 11.8 → 13%인상 등)으로 과밀학급 완화 등 초·중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첨단분야의 고급두뇌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사업(BK21) 지원(1,700억원)
- 전문대 주문식 교육 확대 등 산업현장과 연계된 직업교육 강화(2,006억원)
-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 확충 등 공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지원
- 지방교육세 신설 등 교육재정 지원체계 개선

### □ 문화·관광 진흥

- 문화·관광예산 비중 1% 유지(9,639 → 10,404억원, 7.9% 증가)
-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광역관광권을 문화·관광·휴양이 연계되는 미래형 관광권으로 개발
- 게임·음반·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문화산업진흥기금·영화진흥기금 지원(900억원)
  -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대(3 → 5개소)
- 도서관 정보화 사업, 낙도·오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전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

### 다.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뒷받침

#### □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확충

-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160만명 수준)에 대해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지급(월평균 166천원, 총 2.7조원)
- 자활직업훈련(3만명)·자활인턴사업(1만명) 등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자활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노인·여성가장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부담증가분 지원 등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 지원(19,009억원)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연금 인상 등 예우 강화

#### □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 맑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투자 확충(15,341억원)
-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 등 대기오염 방지 투자
- 자연생태공원 조성(565억원), 위생적인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등 자연친화적 투자 확충(3,618억원)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298 → 823억원)

#### □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 각종 재해예방, 교통안전시설 투자 확충(15,678억원)
- 3대(식품·환경·교통) 반공익행위 추방 지원(852억원)
- 식·의약품,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검역관리 강화

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의 내실화

□ 중소·벤처기업 지원

-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보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지방벤처 집중지역에 초고속망 등 인프라 구축, 벤처 선진국 진출지원센터 확대 등 벤처기업의 지방화·국제화 지원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신용보증, 창업·진흥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
  - 부분보증제 실시 등을 통해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는 확대

□ 농어촌 지원의 내실화

- 그동안 크게 늘려온 생산기반조성분야는 농업생산성 제고와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역점(31,701억원)
- 농산물 규격화 등 유통 S/W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개선을 지속 추진(9,807억원)
-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도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원(2,151억원)
- 국제어업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선 감척과 기르는 어업 육성 지원(3,411억원)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화

- IMF 위기 이후 크게 늘려온 SOC예산은 금년수준 유지
  - 완공·효율위주 투자로 투자편익을 조기에 가시화에 역점
    - 분야별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투자 확충, 첨단교통시스템 등 S/W 개선 투자 확대
- 서해안·중앙 등 주요 간선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22,020억원)
- 철도는 운영 효율이 높은 전철화에 집중 투자(24,154억원)
  - 경부고속철도는 2004. 4월 전구간 개통되도록 지원
  - 호남선 기존선에 대한 전철화를 내년에 착수, 2004년 완공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노선인 서울지하철 9호선 신규 착공
- 신항만 개발과 지역거점 공항에 집중 투자(13,159억원)
  - 부산신항·광양항을 대형 중추항만(Hub-Port)으로 개발
  - 양양·무안 등 지역거점공항 건설에 집중 투자

마. 기타 중점 지원분야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대폭 증액(1,000 → 5,000억원)
  -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교류협력 사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
- 국방예산은 군의 사기와 방위력 유지에 역점을 두어 15.3조원을 반영

- 2001년 공무원 처우개선율 : 6.7% +  $\alpha$ 
  - 내년 공무원보수 수준을 중견기업대비 95.3%까지 접근, 2004년 100% 달성
-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감안하여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자 1.5조원을 새로 반영
- 고유가 시대의 대비한 비축유 구입과 에너지 절약대책 지원확대(5,876 → 7,427억원)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대중운송업체와 LPG차량보유 장애인 등의 추가부담 완화 지원(2,260억원)

## N. 맺음말

- 공공부문개혁이 부진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 공공부문개혁은 그 대상범위가 폭 넓고 과제가 다양
  - 민간부문의 재벌해체, 금융기관 도산과 같은 상징적 조치가 공공부문에는 없다는 정서적 요인이 크게 작용
  - 공직사회 부조리가 잔존하고 공기업 등의 방만 경영사례·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 지속
- 그러나,
  -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공기업·산하기관을 망라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 과거에 계획만 세워놓고 이루지 못한 포철, 한중 등 공기업민영화를 실천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IMD평가에서도 IMF이전으로 정부경쟁력 상승
    - 국가전체 : (97)30위 → (98)35위 → (99)38위 → (00)28위
    - 정부행정 : (97)32위 → (98)34위 → (99)37위 → (00)26위
- 특히 최근의 한전법 국회통과, 한중민영화로 공공부문개혁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공공부문개혁은 일과성 과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지속적 추진과제임
  - 특히 정부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으로 타 부문개혁에 대해 솔선수범하여 추진
- 앞으로
  - 구조조정 과제를 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 하고
  -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 등 S/W 중심의 개혁을 본격 추진  
⇒ 효율성·민주성·투명성 제고로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건전재정을 조기회복하는데 최선